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나상수 063-238-0981

많은 농가들이 병해충 방제를 이유로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이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해 소비자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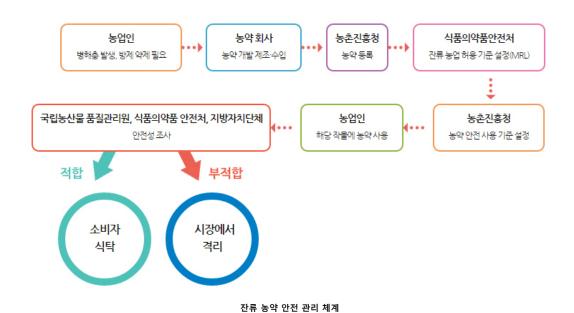
🕦 안전한 농산물 유통으로 신뢰도 높여

매실을 1ha 정도 재배하고 있는 박종운씨는 얼마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받았다. 평소 가족들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실을 재배해 온 박종운씨는 검사결과를 마음 졸이며 손꼽아 기다렸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책임감 있는 농가로 인식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박종운씨는 "불검출"이 증명된 검사지를 받아 매실을 제때 출하했다. 이 매실은 도매시장에서 진행된 2차 안전성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식탁을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로 채우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운씨 처럼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이나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농업인이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소비자와 농업인을 연결한 것이 바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작물만을 시중에 유통하도록 판정하는 절차이다.

⑪ 생산 단계에서 한번, 유통단계에서 또 한번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총 2회 진행된다. 먼저 1차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농산물(시료)을 채취한 후 유해물질 잔류량을 검사한다. 이후 도매시장이나 마트에 반입·유통된 농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번 더 2차 검사를 시행한다.

- 1차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2차 검사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량 회수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농약 등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 2016년 100개 농작물에 대한 8,240건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1개 작물에서 460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온바 있다. 최근 3년간 농산물 안전성 검사 통계를 보면 부적합 작물은 94개였으며, 총 5,413건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건수는 346건 6.4% 수준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 특히 2019년 1월부터는 PLS 시행으로 모든 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 기준이 0.01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부적합률이 상승할 우려가 높다. 실제 0.01ppm은 농산물 100kg당 농약이 1mg 들어 있다는 뜻이다. 쌀을 기준으로 하면 80kg 25가마니 중에 쌀알 1개, 무게로 환산하면 1톤 트럭 100대에 실은 화물 중 1g,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중 1원에 해당하는 양이다. 물을 가득 채운 국제 규격의 수영장(50m×21m×1.98m)에 잉크를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을 때의 농도이다.
- 부적합률을 낮추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강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약직권등록을 통한 사용농약 확보, 농약 관리제도개선 등을 알리고 있다.
- 농업인은 해당 작물에 적용되는 농약의 사용 시기와 횟수 등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정부 그리고 농업인과 농약 판매인 모두가 잔류농약안전관리 체계를 준수할 때 풍요로운 우리 식탁을 건강한 먹거리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